

자치단체장 보수 차등화 … ‘부익부 빈익빈’ 우려

안행부, 재정자립도·행정수요 따라 조정키로

나후 지원대책 없어 전남 지자체 불이익 우려

안전행정부가 시·도지사 등 지방 자치단체장의 보수를 재정자립도나 행정수요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선출직인 단체장에 대해서 중앙정부 공무원의 규정을 적용하는 현재의 보수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단체장이 재정자립도 항상 등의 성과를 낼 경우 이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안전행정부는 26일 “기본적인 보수를 정하고 재정여건이나 인구 등을 통해 상·하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를 결정하는 것은 지자체에 맡길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17개 시·도지사는 차관급 보수를 받는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구에 따라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는 1급 공무원,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지자체는 2급 공무원, 인구 15만명 미만 지자체는 3급 공무원 상당의 보수를 받는다.

자치단체장별로 인구에 따라 정해진 계급에 따라 같은 보수를 받는 셈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도 이 같은 부분에 대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보수를 중앙정부의 직책에 맞춰 지급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올해 안으로 개정하기로 하고 현재 시뮬레이션을 진행중이다.

현재 재정력이나 행정수요 등 비슷

한 기준에 따라 지자체별 보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체계로는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체계가 있다.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은 시도나 시군 구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정하고, 여기에 행정수요를 재는 지표인 의원 1인당 인구와 재정력지수를 곱해 기준액을 정한다.

이어 각계의 추천을 받은 지역대표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해 기준액의 ±20% 안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결정한다. 월정수당에 따라 시도의원의 의정비는 최고 서울시와 최저 세종시가 33% 차이가 난다.

연봉제 적용대상인 임기제(옛 계약직) 공무원들은 보수의 상한과 하한액을 두고 그 안에서 협의해 탄력적으로 보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정책으로 자칫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 수도 적은 전남도와 22개 전남 시·군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성장이나 발전의 동력이 미흡해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나후’ 지자체에 대해 지원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가 6%인 구례군 관계자는 “가뜩이나 지역 자체가 침체돼 있는데 최근 언급되고 있는 지자체 파산제 도입, 단체장 보수 차등화 등의 정부 정책이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현석기자 chadol@yna.co.kr

지자체 기준인건비제 도입 … 인력운영 자율화

정부가 인건비 총액을 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을 관리하던 기준 제도 대신 기준인건비를 정한 뒤 추가적인 자율 범위를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재정여건에 따라 기준인건비의 1~3%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단체장 보수는 물론 정원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지자체 간 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재정여건이 ‘상’인 지자체는 기준인건비의 3%, ‘중’이면 2%, ‘하’인 경우 1% 내에서 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여건이 ‘상’인 지자체는 기준

인건비의 3%, ‘중’이면 2%, ‘하’인 경우 1% 내에서 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

는 것이다.

기준에는 안행부가 지자체의 총정원과 인건비 총액한도를 이중 관리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

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안전행정부는 26일 “기준인건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

한 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여야대표 임을 위한 합창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4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 상경 활동 나선다

광주시·5·18왜곡 대책위

국회의장·여야 대표 면담

광주시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화한다.

기준에는 안행부가 지자체의 총정원과 인건비 총액한도를 이중 관리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

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재정여건이 ‘상’인 지자체는 기준

인건비의 3%, ‘중’이면 2%, ‘하’인 경우 1% 내에서 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

는 것이다.

기준에는 안행부가 지자체의 총정

원과 인건비 총액한도를 이중 관리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

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기준에는 안행부가 지자체의 총정

원과 인건비 총액한도를 이중 관리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

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기준에는 안행부가 지자체의 총정

원과 인건비 총액한도를 이중 관리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

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기준에는 안행부가 지자체의 총정

원과 인건비 총액한도를 이중 관리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

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기준에는 안행부가 지자체의 총정

원과 인건비 총액한도를 이중 관리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

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기준에는 안행부가 지자체의 총정

원과 인건비 총액한도를 이중 관리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

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기준에는 안행부가 지자체의 총정

원과 인건비 총액한도를 이중 관리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

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기준에는 안행부가 지자체의 총정

원과 인건비 총액한도를 이중 관리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

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기준에는 안행부가 지자체의 총정

원과 인건비 총액한도를 이중 관리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

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기준에는 안행부가 지자체의 총정

원과 인건비 총액한도를 이중 관리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

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기준에는 안행부가 지자체의 총정

원과 인건비 총액한도를 이중 관리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

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기준에는 안행부가 지자체의 총정

원과 인건비 총액한도를 이중 관리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

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기준에는 안행부가 지자체의 총정

원과 인건비 총액한도를 이중 관리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

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기준에는 안행부가 지자체의 총정

원과 인건비 총액한도를 이중 관리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

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기준에는 안행부가 지자체의 총정

원과 인건비 총액한도를 이중 관리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

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기준에는 안행부가 지자체의 총정

원과 인건비 총액한도를 이중 관리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

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기준에는 안행부가 지자체의 총정

원과 인건비 총액한도를 이중 관리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

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기준에는 안행부가 지자체의 총정

원과 인건비 총액한도를 이중 관리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

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기준에는 안행부가 지자체의 총정

원과 인건비 총액한도를 이중 관리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

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기준에는 안행부가 지자체의 총정

원과 인건비 총액한도를 이중 관리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

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기준에는 안행부가 지자체의 총정

원과 인건비 총액한도를 이중 관리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

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기준에는 안행부가 지자체의 총정

원과 인건비 총액한도를 이중 관리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

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기준에는 안행부가 지자체의 총정

원과 인건비 총액한도를 이중 관리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

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기준에는 안행부가 지자체의 총정